

해 외 출 장 결 과 보 고

1. 출장건명 : UN ESCAP 초청 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관련 심포지엄 주제발표

2. 출장목적 : UN ESCAP 주관 “저탄소 경제: 무역, 투자 및 기후변화” 지역 심포지엄에서 “농업부문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수단”에 관한 주제발표

※ UN ESCAP에서 한국의 농업부문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수단과 향후 ESCAP회원국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주제발표 요청하였고, 녹색성장 분야의 특별연사(Resource Person)로 초청

3. 출장개요

출 장 자			출 장 지 역	출 장 기 간
소 속	직 급	성 명		
농식품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김창길	인도네시아 발리	2010.10.13-10.15 (2박 3일간)

출장자 소속 농산업경제연구센터 직급 연구위원 성명 김창길 (인)

I. 출장일정

일 시			방문 일정	비고
10/12 (화)	출국	18:00-	인천공항 → 발리 덴파사공항	
1일 10/13 (수)	체류	08:30~18:00	○ 심포지엄 등록 ○ 저탄소경제로의 이행관련 무역, 투자, 기후 변화 관련 주제발표 및 국가발표 세션 참석 및 기후변화 세션 토론자 참여	
2일 10/14 (목)	체류	10:00~18:00	○ 저탄소경제로의 이행관련 무역, 기후변화 및 재생에너지 세션에서 주제발표 및 토론 참여 ○ 농업부문의 저탄소경제로의 이행 세션에 참석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 참여 - 주제발표(제5세션 첫 번째 주제발표) : Policy Measures for Green Growth in the Agricultural Sector ○ 종합토론 및 결론세션의 지정토론자로 참여	
3일 10/15 (금)	귀국	01:30~	발리 덴파사공항 → 인천공항	

II. UN ESCAP 심포지엄 주요 내용

1. 심포지엄 개요

- ESCAP 심포지엄에는 무역과 환경 및 식량안보 등 각 분야별 전문가 11명의 주제발표와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중국, 카자흐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11개 회원국의 국가별 사례발표 등 총 21개 자료가 발표됨.
- 종합토론은 중국, 인도, OECD, 한국, 방글라데시 등 5개국 전문가가 참여하여 발표내용 전반에 대한 평가와 논의가 있었음. UN ESCAP에 따르면 이번 심포지엄에 러시아도 초청하였으나 참석하지 않았고 다른 모든 초청국가가 참석하였다고 함.

2. 개회세션의 발표내용 요지

□ 인도네시아 환경부 Mrs. Sulistyowati 차관보 기념사

-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저탄소경제로 이행하기 위한 범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함. 특히 이번 발리에서 개최되는 12개 UN ESCAP회원국이 참여하는 국제심포지엄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 관련 무역과 투자 및 농업·자동차·펄프 등 여러 산업부문 측면에서 현상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의미있는 행사로 평가됨.
-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에 있어서 무역과 투자는 국가별 여건이 적절하게 고려되어야 현실적으로 작동될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회원국의 관심과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UN ESCAP 무역투자국 Mr. Ravi Ratnayake 국장

-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영향이 커지고 있음. 특히 아시아-태평양지역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3을 차지하고 있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매우 시급한 과제임.
- 아태지역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고 기후변화에 취약하고 빈곤국들이 많아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무역과 투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특히 국제협력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무역과 투자는 중요한 요소이긴 하나 이들 요인이 증가하는 경우 탄소집약적인 생산이 수송 및 소비 등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게 됨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무역과 투자 및 기후변화의 상호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
- 현실적으로 중요한 과제는 무역과 투자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주요 검토사항을 제기함.
 - 기후변화에 따른 완화와 적응조치는 사업기회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음. 청정 및 재생가능한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새로운 사업 창출이 가능하며, 아태지역에서 이들 분야의 시장이 확대될 수 있음.
 - 청정기술을 기초로 한 재화를 대상으로 개도국간의 무역이 확대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짐.
 - 탄소에 대한 국경세부과와 같은 조치는 일명 녹색보호주의(green protectionism)으로 과소평가해서는 안됨.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개발 및 성장시스템하에서 공정하고 개방되고 규약을 기초로 한 다자간 무역시스템은 대부분의 국가가 추구하는 목적임.

-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의 책임분담과 관련하여 개별국가와 국제기구 등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함.
- 이번 저탄소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은 한국정부가 동아시아 기후변화 파트너쉽기금을 통한 자금지원으로 이루어졌고, 한국에서는 녹색성장에 대한 주제발표와 국가사례발표 등에 참여해준데 대한 강한 사의를 표명함.

3. 특별연사(Resource Person) 발표내용 요지

□ 무역과 기후변화: 도전과 기회(Dr. Joy Kim, OECD 환경국 기후대응 전문가)

-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주요국가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야심적인 정책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증가하게 됨.
- 환경조치가 경쟁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모델링 시뮬레이션 분석이나 관련분야 이론을 통해 제시되고 있으나 실제 경험적 증거는 매우 제약적임.
- 탄소 누출과 완화비용에 대한 상계관세(countervailing tax)의 효과에 대한 계량분석 연구가 이루어졌고, 국경 세금조정이 완화비용의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기후변화의 대응책 모색에 있어 기술적 해법이 중요함. 특히 청정기술은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이들 기술개발을 위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함.

□ 투자와 기후변화 완화: 정책과 지역관점(Mr. Marc Proksch, UN ESCAP)

- 투자와 기후변화에 있어서 과거의 모형(old model)은 고투입-고산출의 화석연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분야에 투자가 이루어져 왔음. 최근 투자의 새로운 모형(new model)은 저탄소 생산방식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분야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에너지는 산업생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5%를 발생시킴. 따라서 온실가스 관리의 핵심은 어떻게 에너지를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이용하는 기후 스마트 기술(climate-smart technology)이 관건임.
- 에너지 효율적인 생산과 기후 스마트 생산물에 대한 투자가 저탄소투자임. 저탄소 기술은 상당한 초기자본과 기술적 불확실성 등으로 상당한 위험이 수반됨.
- 저탄소 투자와 관련하여 UNCTAD는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를

UNEP는 벤처캐피탈,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s), 자산금융(asset financing), 인수합병(mergers and acquisitions) 등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

- 효과적인 저탄소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급사슬탄소관리(supply chain carbon management)가 이루어져야 하며, 단계별 탄소발자국 관리체계가 필요함(McKinsey, 2008)
- 기후변화에 대응한 투자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불확실성과 위험의 핵심이슈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고, 특히 재생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기술 분야에 대한 정치적 협상당한 관심과 집중적인 투자와 정치적 의지(political commitment)가 요구됨.

□ 기후 스마트 재화의 무역: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동향과 기회(Dr. Mia Mikic, UN ESCAP)

- 무역의존적 경제성장은 화석연료 집약적 생산과 화물수송의 증가를 가져와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후 스마트 재화와 서비스(Climate smart goods and services, CSGS)에 관심을 가져야 함.
- 2008년 기준 CSGS는 약 4,169억달러로 전체 거래량의 약 2.7%를 차지함. 참고로 개인적 자동차 거래가 전체 거래량의 4.4%를 차지함. 2008년 ESCAP 회원국의 세계 CGCS 무역의 약 40%를 차지함.
- CGCT의 역내무역에서 약 50%차지함. 기후변화는 ESCAP지역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기후변화와 무역에 있어서 사전적 및 국가특정적 정책기조(nation-specific policy framework) 구축이 중요함.

□ 아태지역에서 기후 스마트 재화와 기술의 녹색무역 확대 기회(Dr. Joong-Wan Cho, UN ESCAP)

- 2008년 기준 기후 스마트 재화(CSG)의 수출에서 중국이 36.1%, 일본 30.9%, 한국 7.4%, 홍콩 7.2%, 싱가포르 4.2% 등을 차지함. 한편 수입에서 비중은 중국 30.0%, 한국 13.2%, 일본 10.2%, 홍콩 7.5%, 러시아연방 5.7% 등을 차지함.
- 풍력에너지의 수입국 순위는 중국, 러시아연방, 한국, 터키, 호주, 일본 등의 순이며, 수출국 순위는 일본, 중국, 인도, 한국, 싱가포르 순임.
- 태양에너지의 수입국 순위는 중국, 한국, 홍콩, 일본, 태국 등의 순이며, 수출국 순위는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포르, 한국 등의 순임.
- CSG와 CST의 육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는 재생에너지 목표와 포트폴리오 기준, 재생에너지 인증제, 전력 고정요금매입제도(feed-in-tariffs), 공동조달

(public procurement), 에너지효율성 기준, 연료효율성 기준, 녹색빌딩코드, 녹색 또는 탄소라벨링, 청정개발제도,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국가적정완화조치(National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 등을 들 수 있음.

- CSG와 CST의 육성 관련 어떤 정책을 선택하느냐는 국가별 여건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 지속가능한 에너지 경로(sustainable energy path)로의 전환이 중요하며,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저탄소 기술 지원을 위한 규제와 인센티브의 적절한 결합이 이루어져야 함. 청정에너지로의 도약(leapfrog)하기 위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펄프와 제지산업(Mr. Philip Lawrence, Eco Logical Strategies, Australia)

- 경제사회 발전에 따른 문해율(literacy) 증가로 펄프와 제지산업이 성장하고 있음. 특히 중국의 경우 인구증가와 함께 1990년 이후 제지생산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
- 환경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역U자로 나타내는 환경쿠즈네츠곡선과 같이 문해율이 증가함에 따라 종이 이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어느 수준을 지나면 감소한 경향이 있음.

□ 농업부문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수단(Dr. Chang-Gil Kim,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한국은 2008년 8월 새로운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이 발표된 이후 2009년에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녹색성장 5개년(2009-2013) 실행프로그램을 담은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음.
- 녹색성장 용어는 원래 2000년 1월 이코노미스지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으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경제발전·사회발전·환경보전의 통합)의 개념적 추상성 및 광범위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출된 용어임. 녹색은 환경의 차원을 넘어서서, 성장의 질적 건전성(일자리 창출, 친환경 등)을 포괄하는 함축적·상징적 표현임.
- 녹색성장의 실현을 위해서는 상당한 경제적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특히 편리함을 추구해온 기존의 생활방식을 탈피해야 함으로 불편함과 경제적 비용 수반이 필수적임. 불편함을 최소화하면서 녹색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경제적 유인책, 녹색기술의 개발·보급 등과 함께 관련주체의 이해와 협력이 관건임.

- 농업부문의 녹색성장은 지속가능농업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설정함. 즉 농업부문의 녹색성장은 지역별·수계별 환경용량을 고려하여 재배기술과 농법전환, 환경친화적 또는 저탄소를 지향하는 농업정책 추진 등을 통한 성장을 의미함. 녹색성장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친환경농업과 저탄소 농업 확대 등 지속가능한 농업체제로의 전환과 환경친화적 농업·농촌 기반정비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 한국의 농업부문 녹색성장 추진실적을 보면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한 화학 비료와 농약사용 절감 및 2000년 이후 연평균 약 70% 급성장하고 있음. 2010년 4월에는 농업분야 핵심녹색산업으로 유기농식품산업을 선정하여 적극적인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새로운 녹색기술로 시설농업의 보온시설과 장비(온풍기)의 활용, 지열(지열히트펌프)·공기열(공기식 히트펌프)·태양열을 활용 기술 보급하고 있고, 최근에는 작물재배에 인공광(LED) 기술을 적용하여 에너지절감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농업분야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촉진을 위해 『바이오매스 활용종합계획』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음. 특히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 비료 및 바이오에너지(전력) 생산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2009년 11월 ‘농림수산식품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3대 전략- 9대 추진과제-50개 실천프로젝트로 구성)을 확정하여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농업분야 녹색성장은 미래농업의 성장동력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타분야에 비해 비용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므로 국가온실가스 관리에 기여할 수 있고, 기후의존적인 농업의 경우 녹색성장이 제대로 추진되는 경우 지구온난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온실가스 의무 감축과 관련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농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실천전략은 2030년을 목표 연도로 시스템구축을 위한 기반구축단계, 활용단계, 정착단계 등 3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3. 국가별 발표내용 요지

□ 한국의 녹색성장(Dr. Sangin Kang)

- 녹색경제, 경제성장, 뉴딜, 녹색복원 등 국내외적으로 녹색시대(green era)에 진입하였고, 한국은 2008년 8월부터 녹색성장이 국가발전 핵심 어젠다로 채택됨.
- 국제사회에서도 UNEP의 경우 2008년에 “녹색경제육성(Green Economy Initiative)”, OECD는 2009년에 “녹색성장선언”이 제시됨.
- 한국은 녹색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및 발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수립 추진, 국제적인 연구기관으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개소 등 일련이 조치들이 이루어짐.
-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09-2013)은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동력 창출, 국가위상 강화 등 3대 전략, 10대 정책방향, 50개 실천과제 등 부문별 세부 실행프로그램을 담고 있음.
- 한국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하는 자발적 감축목표를 제시함.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부문별 목표설정 등 녹색성장을 위한 전방위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중국의 녹색무역 정책 소개(Dr. Hu Tao, Chief of Trade and Env Expert Group, 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China)

- 중국의 무역정책은 크게 개발 1기인 적색혁명기(1949-1979), 개발 2기인 청색개방시기(2000년대초), 개발 3기인 녹색경제시대(2000년대 중반이후)로 구분될 수 있음.
- 3기는 환경문제가 경제정책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면서 무역에 있어서도 에너지 절약과 자원효율성, 환경친화성 제고 등 환경을 고려하는 녹색무역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음. 특히 저탄소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황산화물과 아산화물의 감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녹색무역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CGE모형을 이용한 분석결과 탄소배출의 23%, 황산화물 배출의 39%, COD배출의 18%, 물소비의 12% 등이 순무역 교역량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이 발생하기 때문임. 특히 중국은 무역수지는 경제적 측면에서 잉여를 가져오나, 환경지표를 고려하는 경우 손실을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녹색무역 정책으로는 환경관련 내부와 외부, 지역과 국가, 세계 등으로 접근하고, 무역과 관련 수출과 수입으로, 범위와 관련 생산물, 기업, 부문, 거시경제로 구분되고, 수단으로는 관세와 비관세 조치 등을 들 수 있음.
- 중국의 녹색무역 조치로 2012년부터 생산물을 장려재화(encouraged products, 환경

- 재), 허용재화(allowed products, 환경중립재), 제한재화(restricted products, 환경악화재), 금지재화(prohibited products, 환경악화재) 등 네 가지로 분류하여 다룸.
- 녹색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에코라벨 보강, 녹색물품조달목록, 자유무역협정시 녹색무역고려 등의 정책조치를 활용함.
 - 기업수준에서는 ISO 14000 친환경경영을 독려하고, 녹색기업목록화와 블랙네임목록화 등을 추진함.
 - 거시경제수준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새로운 목표를 반영토록 외국무역법을 개정함.
 - 녹색무역의 적극적인 육성을 위해 대학과 연구기관의 컨설팅과 기술적 지원, 전문가회의 활성화 등이 추진되고 있음.

□ **베트남 기후변화 대응과 잠재적 녹색성장(Mr. Hoang Van Tam, Industrial Safety Techniques and Environment Agency)**

-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가 목표 프로그램(National Action Program, NTP)이 2008년 12월에 수립됨. 이 프로그램은 1단계 착수기(2009-2010), 2단계 집행기(2011-2015), 3단계 발전기(2015년 이후) 등 3단계로 나누어 접근
- NTP를 실천하기 위해 산업무역부의 조직정비를 기초로 완화와 적응 등 기후변화 대응 실행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추진
- 기후변화 완화와 관련 새로운 저탄소 신기술 활용, 온실가스 계측 방법론 및 인벤토리 구축, 저탄소 녹색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한 투자확대와 정책우선 등을 제시함.

□ **저탄소경제로 향한 녹색무역과 기후정책: 싱가포르 사례(Mr. Geraldyn Lim, International Trade Cluster)**

- 싱가포르의 기후변화는 1975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실제로 가시화되고 있음. 인구 5백만의 소규모 국가로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0.2%를 차지함. 에너지는 수입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어 나라 여건상 대체 에너지 개발에 상당한 한계가 있음.
-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해 2030년을 목표로 분야별 목표와 청사진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분야별 2030년 목표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1일 일인당 140리터의 물을 사용, 재활용율을 70% 이상으로 제고, 출퇴근시간의 대중교통을 70% 수준까지 제고, 대기정화를 위한 아황산가스를 12 μ g/m³d 이하로 낮추고

- 에너지 효율성과 자원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조금을 폐지와 시장기구 중심으로 전환하고, 승용차에 연료경제성표지제도를 의무화, 핵심 산업부문의 에너지 절약 벤치마킹, 에너지 효율적인 건축으로 전환, 생물다양성 제고 등 특단의 조치를 추진함.
- 가정·지역사회·학교의 환경친화적인 시스템으로 전환하며, 총리실 산하에 국가기후변화사무국(National Climate Change Secretariat)을 설치하고 관련업무를 총괄하고, 2013년부터 에너지보존법 시행으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함.

4. 종합토론

□ 권고사항(General Recommendation)

- 무역과 투자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요인이며 또한 기후변화 완화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온실가스를 완화하는데 시장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나, 정부개입을 통해 민간부문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유력한 완화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 무역에서 탄소발자국제도는 중요하며, 녹색무역이 적절하게 다루어지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탄소발자국 접근이 필요함.
- 많은 개도국에서 기후 스마트 재화를 생산하고 교역하는데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음. 이들 국가들의 기후친화적 활동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국제적인 협력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기후변화 완화는 국가들의 경제성장목표와 상충될 수 있어 국가별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무역 및 투자 등 적절한 정책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 경제성장, 무역, 온실가스 감축의 윈윈 시나리오 설정에 있어서 생산과 수송에 있어 화석연료 에너지로부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관건임. 재생에너지 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에너지 정책은 물론이고 무역과 투자 측면에서도 적절한 인센티브 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 기후변화 스마트 재화와 용역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자간 무역체제, 지역간 양자간 무역에 있어서 협력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개방화조치(liberalization measures)가 필요함.
- 녹색성장, 저탄소 성장 등 유사한 개념이 제시되고 있으나 보다 명확한 용어사용과 개념 정립이 필요함. 또한 농업분야의 녹색성장은 주요한 과제이며 식량안보와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함.
- 온실가스를 완화하고 기후변화를 적응하는데 있어서 지역간·국가간 협력은 매우 중요함. 특히 CDM사업 추진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기술이전, 탄소라벨링 시스템 등에 있어서 ESCAP 회원국간의 유기적 협력관계가 필요함.

□ 패널 권고사항(Panel Recommendations)

-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에 있어서 환경재와 기술이전 등에 있어서 특정 지역의 무역과 투자협정이 필요함.
- 아세안과 여타 지역에 있어서 중국의 기술을 확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고, 또한 에코라벨링 시스템 회원국간에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인증관리시스템 구축도 필요함.
- 녹색경제에 있어서 핵심과제는 에너지 효율성 제고이며, 이를 위한 탄소세와 규제 등 적절한 정책결합이 필요함.
- 녹색성장은 특정국가에서 추진하는 특별한 방식이 아니며 이미 많은 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며, 다만 온실가스 관리에 상당한 비중을 두어 정책기조와 실행프로그램을 추진하자는 것임.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단계적 중장기적 접근이 바람직함.
- 회원국별로 다양한 녹색성장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정보공유를 위해 수단별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ESCAP 사무국에서 정책행렬(policy matrix) 작성이 필요함.
- 녹색무역과 투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글로벌 및 지역적 파트너쉽과 거버넌스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함.
- 글로벌 차원에서 녹색성장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기후변화협약에 명시된 대로 국가별 능력과 여건이 반영된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원칙의 준수가 중요함.

III. 종합 및 평가

- 이번 심포지엄 참석자는 대부분이 무역과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정책담당자와 연구자들이 주류를 이루었음. 농업분야 전문가와 관계자가 많지 않아 논의대상도 비농업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 녹색성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고 있었으나 기존에 국가별로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정책이 녹색성장이고 지속가능발전과의 차별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국가도 있었음.
- 녹색성장에 대해 한국에서 너무 이니셔티브를 주장하는 경우 일부 국가의 반감이 우려되므로 국제협력에 있어서 타국가의 녹색성장 성과를 인정하고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협력과제 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한국의 녹색성장을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하며 가능하다면 녹색생산성의 경제적 분석과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UN ESCAP 관련 주요 사진>



<심포지엄 참석자 전체 사진>



<5세션에서 한국의 농업부문 녹색성장 주제 발표>